

## 한국의 인문학 위기와 인문학의 대중화 담론 일고

신동순\*

### < 목 차 >

1. 왜 인문학 위기를 재론하는가?
2. 한국의 인문학 위기와 인문학의 대중화에 관한 담론들
3. 관·민이 말하는 인문학과 인문학 대중화를 둘러싼 의식들
4. 본연의 인문학과 껴어있는 대중을 찾아서

### <국문제요>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인문학 위기와 인문학의 대중화 담론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 ‘본연의’ 인문학 찾기와 ‘살아 있는’, ‘껴어있는’ 인문학의 대중화를 추구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 지원사업과 시민단체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생산하는 인문학과 그를 둘러싼 의식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와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본연의 인문학을 고민하면서, 인문학을 낯설게 보기와 “불온한” 인문학, 인문학에 싸움을 거는 인문학 추구를 통해, 지금 현재 우리의 인문학과 인문학 대중화열풍 현상에 대해 다시 회의(懷疑)하고자 한다.

키워드: 인문학 위기, 인문학대중화 열풍, 인문학진흥사업, 회의(懷疑)정신, 본연의 인문학

## 1. 왜 인문학 위기를 재론하는가?

한국에서 90년대 중반 이후 논의되었던 인문학의 위기는 여전히 2015년인 지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조교수, shinmar@sm.ac.kr

2 2015년도 제1회 한중인문학포럼

급도 위기인체로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인문학은 자본과 국가 권력에 의해 이화(異化)되어 왔다. 자본의 가치가 인간 가치보다 우위에 서서 군림하고, 돈과 기술이 인간을 재단하고 조롱한다. 인성이 파괴되고 인간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세상의 중심에 서야 하는 “人”은 수치화되고 계량화되어 가격으로 매겨지고 자본의 노예로 전락되고 있다. 돈이 부모 자식의 관계를 파괴하고 형제간에 불화를 만들며, 사제 간의 후안무치를 조장한다. 인간 사이에 폭력을 부채질하고, “人”의 인감됨의 삶을 농락하고 비웃는다. 인간은 인간임을 포기하고 인간되어짐을 경시하면서 정신적 줌비가 되어간다. 우리는 조작된 숫자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상의 의식에 저항해야 한다. 그 저항의 근간에 인문학이 존재한다. 세상의 의식들이 혼탁하고 어지러울수록 “본연의 역할”<sup>2)</sup>을 수행해 가는 진정한 인문학을 호명해내야 한다.

지금 한국은 인문학 열풍 현상에 쌓여 있다. 인문학과 관련된 단행본을 검색하면 과학기술에서부터 스포츠까지 모든 영역에서 인문학을 외치고 있다. 건축, 의상, 음식, 영화, 음악, 미술, 의학, 여행, 사진, 연애, 경영, 처세, 동식물, 화폐, 주식, 비즈니스, 뷰티, 마술, 만화, 종교, 축제, 광고, 환경 등등에서 인문학을 접목시키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버렸다. 이런 인문학 열풍의 이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문정신의 부흥과 인문학 지원을 토대로 해서 창조경제를 건설하겠다는 정치의식도 한몫을 했다. 정부 차원에서 인문학 지원 사업을 확대하였고,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었다. 이와 동시에 시민단체 역시 독립적으로 인문학 나눔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 안에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열풍이 일고 있지만 인문학의 교육과 연구를 책임지는 대학에서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인문대학의 축소, 철학과 폐과, 문학 관련된 학과나 사학과들의 통합과 인원 감축 등 이공계 학과들 외에 인문·사회·예술 관련 학과들은 폐과나 통합, 감축이라는 위기를 맞았다. 학과의

2) 한국인문총연합회 사이트 <인문학 선언문> 참고.

[http://www.hak.re.kr/modules/doc/index.php?doc=declaration&\\_\\_M\\_ID=84](http://www.hak.re.kr/modules/doc/index.php?doc=declaration&__M_ID=84)

존폐는 철저하게 시장성과 효율성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 매겨졌고, 취업률이라는 잣대로 평가되었으며, 인문학은 '쓸모없는 공부'로 인식되어져 축소나 감축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문학 지식 생산의 근간을 이루는 학문후속세대들의 배출은 더 열악해져졌다. 대학 안에서는 대학 평가를 앞세워 연구비 수주 혹은 파이의 분배라는 이름으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문과대와 이공대가 서로 분열되어 상대방의 학문을 경시하고 비하하는 발언도 오고간다. 21세기 대학은 공대를 만들어야 살아남는다는 인식에서 분과학문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숫자에 놀아나는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대학들도 생겨났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인간의 가치와 삶의 궁극적 의미를 탐구하고 그 철학적 사유를 토대로 인간 중심의 사회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학들은 학문 효용성과 실용성에 매달려 학원이 되어 간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17일 부산대학교 국문과 고현철교수가 투신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작금의 엄중한 현실과 그를 외면하는 대학 교수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저항하였다. 대학에서 민주주의 정신이 사라진 지 오래다. 큰 대(大)자에 배울 학(學)자, 큰 배움을 추구하는 장(場)이라는 개념도 사라진 지 오래다. 대학은 취업에 의한 취업을 위한 기능인 양성의 학원으로 변질되어간다. 진리를 탐구하고 자유와 정의를 외치는 "대학은 (그의 말대로 이미) 죽었다."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참다운 지식인을 길러내는 대학의 신성성은 제거되고 불구가 되었다. 정의와 진리, 자유와 평등, 선행과 사랑을 철학적 명제로 삼는 대학의 인문학적 사유도 자본과 국가 권력에 물들어 버린 지 오래되었다. 일부 교수들은 그 속에서 그렇게 물 타기를 하고 밥그릇을 챙기며 줄서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문학의 위기를 외친다. 어떤 인문학을 말하는 것일까. 대체 누가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압사하는 학문을 계승해 갈 것이며, 발전시켜 갈 것인가. 인문학을 생산하는 구조와 인적 자원들을 사장시키면서 우리는 과학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 의학과 인문학의 결합, 건축학과 인문학의 결합 등 전 영역에서 인문학의 접합을 외친다. 사뭇 모순적이다. 그럼 우리는 인간 사회의 근본인 인문정신과 인문학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과연 지금 여기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4 2015년도 제1회 한중인문학포럼

한 본연의 인문학은 어디에 있는가.

## 2. 한국의 인문학 위기와 인문학의 대중화에 관한 담론들

인문학 위기에 대해 “인문학 선언문”이 발표된 지 이미 20여년이 지나고 있다. 1996년 11월 국공립대 인문대 학장들이 발표한 “인문학 제주 선언”, 2001년 국공립대 인문대학 협의회의 “2001 인문학 선언”, 2006년 9월 고려대 문과대학 교수들이 발표한 “인문학 선언문”, 이어진 80여개 대학 인문대 학장들이 “오늘의 인문학을 위한 우리의 제언”이 있다. 2012년 박근혜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인문정신 부흥과 인문학 지원을 강조하자 사회 도처에서 인문학에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그해 10월 그간의 인문학 발전 흐름을 성찰하면서 한국인문학총연합회(이하 인문총)가 만들어졌다. 인문총은 창립대회에서 또 다른 “인문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들은 인문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현재’의 위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위기를 타개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2006년 “인문학 선언문”은 특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촉구하며, “정부와 정부기관이 ‘인문학 진흥 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국인문학위원회”와 “인문학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주관)는 인문학 부흥을 위해 10년 동안 지원되는 “HK사업”을 시작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주도의 인문학 대중화 사업들이 진행되었다.<sup>3)</sup> 정부 지원 인문학 진흥과 대중화 지원 사업은 성공적으로 보였다. 많은 대학 연구소나 인문학 연구자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매달렸다. 그리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나왔고 각 영역에서 ‘인문학’의 접목들이 이루어졌다. 인문학 위기에 대한 나름의 성찰들이 진행되었고, 인문학 부흥을 위한 나름의 노력들이 있어 왔다.

그러면서 인문학의 위기 타개는 인문학을 대중화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관련

3) 신중섭,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비인문학적 단상들」, 『철학과 현실』 95호, 96쪽 참고.

된 제반 사업들이 활기를 띠었고 일명 대중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런 인문학 열풍과 대중화는 어찌되었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긍정적인 일면을 보여주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인문학을 주목하였고, 인문학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각자 다들 자기 영역에서 모두 인문학을 외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외치는 인문학이 어떤 것인지 회의(懷疑)정신을 갖고 분열적으로 그 속내를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과연 이런 인문학의 대중화 열풍이 어떠한 인문학을 어떻게 대중화하고 있는지, 열풍으로 호명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일각에서는 인문학 선언문이 “인문학 파탄 선언”<sup>4)</sup>이라는 극단의 쓴 소리도 있다. “정부 주도의 행사성 인문학”<sup>5)</sup>이라고도 한다. 또 기업의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대상으로서 인문학이라고도 한다. 인문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결국은 그 지원에 스스로 포섭되어 자기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거기에 매달려 “자유롭게 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sup>6)</sup> 상황이 벌어진다.

또 “신자유주의 하에서 학문은 성과주의에 의해 평가되고 자본주의적 효율성과 생산성의 논리에 의해 재단”되며, “지식생산자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미래의 노동자로서의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자본주의적 축적 논리에 일방적으로 종속”시키고 있고, 인문학 내부는 무능함으로 인해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sup>7)</sup> 인문학 내부에 인문학 수용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기초학문이 배제된 과도한 몰이해적인 분과학문주의, 학문의 민족주의, 학문체계의 혼란 등을 말한다. “한국의 인문학 학문들은 분과학문으로서의 자신의 성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분과학문체제를 구축하여 그 속에 생존을 구하고 있을 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피력한다.

4) 임상우, 「인문학의 실용성과 실용적 인문학」, 『2006인문주간 학술제 ‘열림과 소통의 인문학’』, 81쪽. 조관희, 「‘인문학 위기’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1」, 『중국어문논집』제48호, 489쪽 재인용.  
 5) 유범상, 이현숙, 「인문학대중화에 대한 비판과 제언: 정부와 시민사회의 두 인문학을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제38집, 165쪽.  
 6) 조관희, 「‘인문학 위기’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1」, 『중국어문논집』제48호, 487쪽.  
 7) 강내희, 「한국 인문학의 제도적 문제들」, 『서강인문논총』제23집, 7쪽.

6 2015년도 제1회 한중인문학포럼

또 한편으로는 “인문학 위기”는 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을 넘어서서 대중과 소통하고 그들을 변화 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닌 인문학, 이런 인문학의 대중화가 ‘위기’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임성훈은 인문학의 대중화에 대해서 대중화가 “인문학 위기” 담론에서 대안일 수 없다. 대안적 요소로서의 대중화는 도구적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문학의 대중화’상 그 자체를 흐리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도구적 성격의 대중화가 아니라 인문학 본연의 과제에서 물음과 반성을 수반한 대중화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제대로 된 ‘인문학의 대중화’라고 본다.<sup>8)</sup> 인문학의 대중화의 도구적 성격을 경계하며 인문학의 본연을 지향하는 대중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 그동안의 인문학을 성찰하며 “자본과 국가의 이해에 편승한 덕분에 호의호식하는 순응주의자의 인문학. 대중적 삶의 지평에서 유리되어 고전에만 집거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인문학”을 현실을 외면한 자기 기만적인 인문학으로 비판하며, 국가와 자본의 통제를 받아 배치되고 있는 인문학과 대중화 열풍에 이의를 제기하였다.<sup>9)</sup>

이런 비판적 성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2년 10월 한국인문학총연합회가 출범하였다. 그리고 ‘인문학 선언문’<sup>10)</sup>이 만들어졌다. 발표문은 앞서 나왔던 선언문과 색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인문학의 “본연의” 의미를 돌아보며 작금의 인문학이 협소한 분과 학문의 틀 안에 갇혀 근본정신을 망각하고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닌 직업으로서의 인문학, 즉 “인문정신을 상실한 인문학은 인간의 위기와 역사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견을 한다. 진정한 인문학 부흥을 위해 “한국 사회는 인문정신의 회복에 힘써야” 하고, “인문학 발전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져야” 하며, “인문학자들은 한국의 풍부한 인문전통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하고, “한국의 인문학은 세계의 다양한 인문전통과 소통하고 타학문 분야와 소통함으로써 보

8) 임성훈, 「인문학과 대중화」, 『인물과 사상』 2006년 11월호, 206쪽. 조관희, 「‘인문학 위기’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중국어문논집』제48호, 491쪽 재인용.

9) 최진석 외, 『불온한 인문학-인문학과 싸우는 인문학』,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1년, 18~19쪽.

10) 한국인문학총연합회 사이트 <인문학 선언문> 참고  
[http://www.hak.re.kr/modules/doc/index.php?doc=declaration&\\_\\_M\\_ID=84](http://www.hak.re.kr/modules/doc/index.php?doc=declaration&__M_ID=84)

편적 가치를 창조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문총은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인문학진흥법’을 제기하였고 그동안 입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으며, 2013년 말에는 국회에서 3개의 인문학진흥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현재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접근을 진행하고 있다.<sup>11)</sup> 정치적 필요에 의해 제기되던 한시적인 인문학 진흥이 아니라, ‘인문학’을 토대로 삼는 교육 제도의 개혁과 변화를 추동해 내고, 우리의 삶과 현실 사유에 자양분이 되는 인문학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 3. 관·민이 말하는 인문학과 인문학 대중화를 둘러싼 의식들

인문학에 대한 사유와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행해졌을까. 즉 인문학과 관련된 ‘행사’ 혹은 ‘프로그램’, ‘기획들’은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는가. 그 생산의 대표적인 주체는 크게 정부와 시민단체들, 대학과 기업체들이 있다. 그들이 제시하는 인문학과 인문학의 대중화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자.

2006년 인문학 연구자들의 선언문 발표 이후 정부 주도의 국책 사업들이 연이어 시행되었고,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인문학 연구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연구소가 개설되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다. 또 그밖에 대학에서의 강좌, 기업체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의 인문학 강좌들이 자본화되어 소비되고 있는 중이다.

먼저 인문학 대중화를 주도하는 행정 부처로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있다. 교육부 산하의 한국학술진흥재단(이후 한국연구재단)은 인문학자들을 모아 인문학 진흥 방안을 모색했고, 연구소 및 저술 발간을 지원하고, 대중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대학이나 연구자들에게 인문한국(HK)사업이 주어졌고, 연간 400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다. 2014년 학술연구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두 배로 증액되면서, 인문학대중화사업단은

11) 2013년 11월과 12월 신계륜과 이명수에 의해 국회에서 ‘인문학진흥 및 인문강좌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인문사회과학진흥법안’이 발의되었고, 김장실에 의한 ‘인문정신문화진흥법안’이 문체부 주관부처로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다. 류동춘, 「인문학진흥법」, 『2015년 인문학 진흥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34쪽 참고.

8 2015년도 제1회 한중인문학포럼

시민강좌, 인문주간 선포, 인문도시 건설, 세계인문학포럼, 석학인문학을 만들어 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런 인문학 연구지원과 대중화 사업 프로그램 제작 실행으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확산을 가져왔다. 하지만 인문학 교육과 연구의 장인 대학의 평가에 취업률과 정량적 연구 실적을 주요지수로 내세워 대학의 인문학 학문 환경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문학은 이공계에 밀리고 산업적 차원에서 ‘쓸모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인문학을 하려는 학문후속세대는 갈수록 고갈되는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한 손에는 ‘진흥’이라는 명목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한 손에는 ‘취업률’이라는 지수로 압박하는 양면적 위치에 놓여 있다. 인문학은 인문학이다. 인문학은 인간의 삶과 현실을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학문이다. 그런 인문학에 다른 어떤 불순물을 섞지 말아야 본연의 고유한 인문학이 살아남을 수 있다. 거기에 자본과 국가 이데올로기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고유한 그것으로 발전해 갈 수 있게 보좌의 역할을 하면 그만이다. 그것을 기금을 매개로 소유의 개념으로 끌고 가지 말아야 한다. 주체적인 힘과 독립적인 사유를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몫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살아있는 인문학이 존재할 것이다.

문체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 공공도서관과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들과의 인문학 나눔을 실행했다. 그리고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에 의거해 2008년 <제1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09~2013)>(이하 1차 계획)와 2013년 <제2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이하 2차 계획)을 만들었다. 계획들은 국민들의 독서문화 향상과 독서활동 보장 등 인문정신의 사회적 소통과 확산을 위해 구체적인 전략과 세부과제들을 제시하였다. 1차 계획에서는 “독서의 생활화로 국민 행복지수 제고 및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독서환경 조성,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사업 추진, 독서운동 전개,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독서진흥계획의 실행과 성과 점검을 위한 시스템이 미흡하였고, 국민 독서율을 올릴 수 있는 제도적, 실제적 여건이 형성되지 못했으며, 독서율이 저조한 저소득, 저학력, 고연령층에 대한 독서진흥 정책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sup>12)</sup> 이를 토대로 2차 계

획<sup>13)</sup>은 “책으로 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국민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회적 독서 진흥기반 조성”, “생활 속 독서 문화 정착”, “책 읽는 즐거움의 확산”, “함께 하는 독서복지 구현”이라는 4대 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독서진흥 협력 체계 구축, 지역 독서공동체 조성, 책 읽는 직장 만들기, 디지털 독서문화 확산, 생애 주기별 독서활동 지원, 독서 정보 시스템 구축, 독서를 통한 인문정신문화 확산, 독서장애인 도서서비스 확대,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강화, 병영 및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 다문화가정의 독서 접근성 제고 등등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문체부는 이런 전략과 과제들을 통해 2018년까지 성인 연간 독서율을 8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재 2014년 연차보고서<sup>14)</sup>가 발표되었고, 각 과제들이 지금 ‘원활한’ 자금으로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거기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율이 관건이다. 참여율이 높아진다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이 “풀뿌리 인문학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순응과 수용의 교양”을 생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sup>15)</sup>

국가 주도의 다양한 정책 사업들과 지원은 인문학에 대한 대중적, 학제적 관심을 증폭시키는데 일정정도 기여를 했다고 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사를 위한 행사, 연구자의 주체적 사유를 ‘사업’과 ‘성과’라는 틀 안에 가두어 학문을 통제한다는 평도 있다. BK21이나 HK 지원사업은 국가가 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에 국가이데올로기가 개입된다. 그것은 인문학과 인문학자의 자율적인 연구를 위축시키고, 각 대학들은 국가 지원금을 얻기 위해 공색한 줄을 서게 된다. 이런 인문학은 “순응주의의 뒷에 갇힌 채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노정하기보다는 기성의 서사를 공고히 하고 재생산하는데 착취될 따름”<sup>16)</sup>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문학

12) 문화체육관광부,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4~2018)」  
 13) 문화체육관광부,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4~2018)」  
 14)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15) 유범상, 이현숙, 「인문학대중화에 대한 비판과 제언: 정부와 시민사회의 두 인문학을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제38집, 181쪽.  
 16) 최진석 외, 『불온한 인문학-인문학과 싸우는 인문학』, (주)휴머니스트 출판 그룹, 2011년, 87쪽.

10 2015년도 제1회 한중인문학포럼

이 “자본주의적 패러다임 안에 있는 한 스스로 융성하거나 자립적으로 지속 가능한 존재 방식을 찾을 수가 없”으니, “국가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고도 한다.<sup>17)</sup> 국가적 차원에서 인문학이라는 기초학문을 육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up>18)</sup> 또 포스트 인문한국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기존 인문한국 지원사업의 인건비 중심에서 연구사업비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인문한국 지원사업 성과의 사회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sup>19)</sup> 대책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전략적 기술(記述)을 쫓는 것이 아닌, 행사나 사업으로서가 아닌 인문학 본연에 대한 사유와 연구, 그런 본연의 인문학의 확산과 주체적 인문학의 대중 소통을 위한 의식과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인문학은 “불온한” 의식을 갖고 “인문학과 싸우는 인문학”<sup>20)</sup>을 해야 한다.

한편, 민간 주도의 인문단체 연구모임과 대중적 소통 및 실천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 실천 모임으로는 수유+너머, 노마디스트 수유 너머N, 철학아카데미, 길담서원, 감이당, 다중지성의 정원, 교육공동체 나다, 문탁 네트워크, 문화사회연구소 등이 있다. 이들의 소통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으로는 수유+너머의 “인문학 주간”, 2007년 “시민지식 네트워크를 위한 독서 프로젝트”, 2008년에는 소수자들을 위한 인문학 행사, 재소자들과 함께 하는 “평화 인문학”, 노숙인의 “성프란시스 대학”, 탈성매매 여성의 “W-ing 인문학 아카데미”, 문화사회연구소의 시민대상의 독서모임 등이 있다. 삶의 체험 현장을 돌아다니며 현장 인문학을 강의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 이들은 삶과 현실을 고민하는 주체적 인문학을 일반 시민들과 나누면서, 제도권 밖에서 독립적으로 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문체부의 독서문화 확산 정책을 공

17) 강진호, 「포스트 인문한국(Post-HK)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지원 방향」, 『2015년 인문학 진흥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15쪽.

18) 박병수, 「죽어가는 인문학에세는 2000억 물이 아니라 땅이 필요하다-교육부의 취업률과 정량적 연구실적 조장, 재정지원 유혹 학과통폐합」, <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5173> 참고.

19) 강진호, 「포스트 인문한국(Post-HK)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지원 방향」, 『2015년 인문학 진흥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자료집』, 16쪽.

20) 최진석 외, 『불온한 인문학-인문학과 싸우는 인문학』,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1년..

유하고 문체부가 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되, 간섭과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스웨덴의 학습동아리 모델처럼 성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sup>21)</sup>

이 밖에도 대학이 주체가 된 인문학 강좌가 있다. “서울대 인문학 최고위 과정 (AFP), 서강대 최고경영자 과정(STEP), 인문학 조찬 특강 등등 CEO와 정계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좌가 높은 수강료에도 불구하고 성업 중이다.”<sup>22)</sup> 인문학은 대학의 특강과 교양으로, 교양서와 교과서로 넘쳐나고 있다. 또 기업체들의 인문학 강좌(예를 들면 포스코의 인문학강좌), 백화점 문화 센터의 인문학 강좌 등 인문학은 경영과 마케팅의 인문학으로, 교양의 인문학으로 대중화되고 소비 중에 있다.

#### 4. 본연의 인문학과 깨어있는 대중을 찾아서

1990년대 이후 인문학 위기 담론과 그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과 노력이 있어 왔다. 2006년 인문학선언문 이후 국가 지원의 국책 사업과 시민단체들의 인문학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나왔다. 이번 정부의 인문학을 지원하고 인문정신을 부흥시켜 이를 토대로 창조경제를 이루겠다는 생각은 정책에 반영되어, ‘인문학’ 지원 사업들을 발표하고 실행하였다. 시민단체의 인문학은 대중과의 소통과 실천에 주목하고, 대중이 다중이 되는데 토대가 되기를 희망했다. 우매하고 수동적인 혼육된 대중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깨어있는 대중, 눈앞의 인문학을 회의(懷疑)하고 불온하게 바라볼 수 있는 대중의 교육을 담당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사업은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시민단체의 프로그램은 기금을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부의 시각이 개입되지 않는 자율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다중을 만들어 내는 시민단체의 인문학 프로그램에 독립적 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본연의 인문학에 한 보 더 다가가지 않을까 싶다.

21) 유범상, 이현숙, 「인문학대중화에 대한 비판과 제언: 정부와 시민사회의 두 인문학을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제38집, 172쪽 참고.

22) 최진석 외, 『불온한 인문학-인문학과 싸우는 인문학』, (주)휴머니스트 출판 그룹, 2011년, 42쪽.

지금 대학의 인문학은 과학에 압도당하고, 취업 지수라는 시장 논리로 인해 소외되고 있다. 또 교육부 대학 평가에 취업률이 주요 지수가 되고부터는 인문학의 근간이 되는 문학과 역사, 철학 관련 학과들이 구조 조정되었고, 철학과는 아예 대학에서 사라졌다. 학문과 학과의 위기를 구분해야 하고 각 대학들의 인문학과 비율이 과도해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인문학 근간을 흔드는 철학과 의 폐과는 비율 문제로 볼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개혁을 해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공유해야 하는가? 그 의식은 과연 인문학 발전을 추동할 수 있을 것인가? 반문에 반문을 하면서 그 내면의 정치성에 회의(懷疑)에 회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문학을 질기게 추문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문학 내부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는 비판적 지식인을 양성하고 인문학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며, 그것의 실천력을 담보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은 '大學問'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더욱더 철학이나 문학, 역사라는 인간사회의 기초가 되는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인문학 교육은 대학 뿐 아니라, 초등과 중등교육 과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과 과정 안에 본연의 인문학을 넣고 그를 통해 인간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진짜 인문학을 찾아가야 한다. 인문학의 진정한 본연성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인문학에 대항하는 인문학! 지금 인문학의 부흥시대를 낫설게 바라보고 판지를 걸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와 자본에 잠식된 (조작된) 인문학의 영토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sup>23)</sup>

#### 〈참고문헌〉

최진석 외, 『불온한 인문학-인문학과 싸우는 인문학』, 서울,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1.  
백낙청, 『주체적 인문학을 위하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11.

23) 최진석 외, 『불온한 인문학-인문학과 싸우는 인문학』,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1년, 82쪽.

- 강양구 외, 『싸우는 인문학-한국 인문학의 최전선』, 서울, 반비, 2013.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인문학 진흥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한국연구재단, 2015
- 강진호, 「포스트 인문한국(Post-HK)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지원 방향」, 『2015년 인문학 진흥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자료집』, 서울, 한국연구재단, 2015.
- 신중섭,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비인문학적 단상들」, 『철학과 현실』 95호, 서울, 철학문화연구소, 2012.
- 유범상, 이현숙, 「인문학 대중화에 대한 비판과 제언: 정부와 시민사회의 두 인문학을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제38집, 서울,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 임성훈, 「인문학과 대중화」, 『인물과 사상』 2006년 11월호, 서울, 인물과 사상, 2006.